

9.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4월 6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 상정일자 :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년 4월 20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전재경)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통일(안 제6조)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서오섭)

○ 안 제6조는

-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조례에서 해촉 사유를 삭제함.

○ 안 제8조제4항은

- ▶ 시행령 제10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는 2015년 10회(대면 4회/26건, 서면 6회/9건), 2016년 10회(대면 6회/36건, 서면 4회/6건), 2017년 2회(대면 2회/5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회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로 운영되고 있음.
- ▶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필요함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목록

관리번호	심의기간	발주기관	건 명	심의결과
서면심의 제 1-1호	2015.4.14. ~4.16	정보화 담당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1-2호	2015.4.14. ~4.16	원스톱 기업지원관	대구국가산업단지 글로벌산업융합 비즈니스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2-1호	2015.7.2. ~7.7	첨단의료복합 단지지원과	「첨단 뇌정밀의학 클러스터 구축」 학술연구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3-1호	2015.8.24. ~8.31	교통정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연결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조사」 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3-2호	2015.8.24. ~8.31	의료산업과	이동형병원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4-1호	2015.9.7. ~ 9.11	대구도시 철도공사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건설공사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4-2호	2015.9.7. ~9.11	수성구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201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5-1호	2015.12.4. ~12.8	건설본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6-1호	2015.12.16.~ 12.18	의료관광과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1-1호	2016.2.17. ~2.19	시설안전 관리사업소	월성빛물펌프장 외 1개소 제진기 교체(구매설치)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2-1호	2016.4.20. ~4.22	미래형 자동차과	전기자동차 비즈니스모델 실행 연구 용역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2-2호	2016.4.20. ~4.22	건설본부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2단계 조성공사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3-1호	2016.7.29. ~8.3	건설본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3-2호	2016.7.29. ~8.3	건설본부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2단계 조성공사	원안의결
서면심의 제 4-1호	2016.8.26. ~9.1	도 로 과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원안의결

참고 2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단위 : 천원)

설치년월	개최현황 (회수)	소요예산		운용내용	비고
		예산	집행		
2006. 5. 24.	2015년 10회	9,100	3,900	심의 : 35건 - 공사 2 - 용역 28 - 물품 2 - 부정당업자 제재 3	·대면 4회 ·서면 6회
	2016년 10회	15,200	10,420	심의 : 42건 - 공사 6 - 용역 30 - 물품 3 - 부정당업자 제재 3	·대면 6회 ·서면 4회
	2017년 2회	15,200	4,025	심의 : 5건 - 공사 1 - 용역 3 - 부정당업자 제재 1	·대면 2회

참고 3**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6기)**

□ 위 원 수 :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위촉기간 : 2016. 5. 24 ~ 2018. 5. 23(2년)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소 속	비 고
1	위원장	이 진 형	남	대구경북홍사단 (사무처장)	위촉직
2	위 원	서 란 주	여	교수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
3	"	김 정 민	여	교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
4	"	김 민 정	여	변호사 (김민정법률사무소)	"
5	"	박 태 영	여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
6	"	전 해 영	남	건축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
7	"	오 용 석	남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8	"	김 대 목	남	前 대구광역시 공무원	"
9	"	전 재 경	남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참고 4**법령해석 사례(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회신일자2016-02-2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10. 회신 08-0337 해석례).

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